거물급 출마에 '미니 대선' 급 보선

이재명 계양을·안철수 분당갑 수도권 선거 선봉장 역할 다짐

이재명 출마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나란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난 '대선에 이은 2차전'을 치르게 됐다. 이 전 지사는 민주당이 지지세가 강한 인천 계양을, 안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지지가 두터운 성남 분당갑으로 정했다.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거물급 주자들로서 당선이 유력한 안전지대를 택한 것으로, 지역구에 얽매이지 말고 인근 지역의 바람몰이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단순히 '여의도 입성' 차원을 넘어, 같은날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의 '수도권 선봉장'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차기 재도전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동시 출격으로 이번 선거는 대선 연장전 성격으로 치러지게 된 동시에 '미니 대선'으로 체급이 올라가게 됐다. 그만큼 두 사람의 정치적 미래도 지방선거 결과와 연동돼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 상임고문인 이 전 지사를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하는 한편 지방선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 전 지사는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며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대위 총사령탑의 총대를 멨다.

일각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당장 지방선거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당내 위기감과 지도부의 거듭된 요청에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정치 전면에 복귀하게 됐다.

지도부가 민주당 강세지역인 계양을에 이 전 지사를 전략공천한 것도 선대위 선봉장으로서 지방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지역구 선거운동에 몰두하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받은 1600만표의 여세를 몰아 전국을 돌며 4년 전 압승에 버금가는 결과를 재연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이날 인천 계양산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자택도 조만간 지역구 내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출마 지역구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지만, 별다른 지역 연고가 없는 계양을 출마를 놓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선대위 지휘봉을 쥔 것과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분당갑은 자신이 창업한 안랩의 소재지인데다 보수색채가 강하다는 점에서 외곽 지원 활동에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이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러닝메이트로 뛰면서 최대 승부처이자 격전지인 경기도 선거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바라는 눈치다.

경기도는 이 전 지사의 '안방'인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3·9 대선에서 패한 곳이라 국민의힘으로선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안 위원장과 김은혜 후보의 시너지 효과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안 위원장의 지지층인 중도층이 움직일 경우 경기도는 물론 전국적으로 다시금 '안풍(安風)'이 불면서 선거판 자체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기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서 졌던 경기도에서 안 위원장이 승리를 가져온다면 대선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2단계 정권교체'를 달성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광주 광산구청장 경선 '금품 살포 의혹' 진실 공방

탈락 후보들 "금품 살포 의혹 수사" 박병규 후보 "1차 조사 사실 무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박병규 예비후보가 결정됐지만,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박 예비후보 측의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경선에 나섰던 김학실·이영순·윤난실·윤봉근·최치현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들은 8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후보의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월 중순께 박 후보가 광산구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A씨에게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며 "녹취록에는 박 후보가 또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전한 의혹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병규 후보 측은 "의혹이 제기된 뒤 광산갑 지역위원회에서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해 그 내용을 중앙당과 광주시당에 제출했다"면서 "중앙당의 신속한 결론이 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1차 조사에서 사실 무근이 확인되고 중앙당의 최종 확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히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람조차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의혹제기를 통해 경선에 불복하겠다는 정지적 의도"라면서 "이는 정치적 기획 공작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사법처리로 공작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병태 민주 나주시장 후보, 선대위 출범 '성황'

김영록·신정훈·소병철 등 참석

윤병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후보는 지난 7일 나주시 빛가람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과 함께 '나주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개소식과 선대위 출범식에는 신정훈·소병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영록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민주당 나주지역 도의원·시의원 공천 후보, 당원 및 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윤 후보는 인사말에서 "28년 동안 기재부, 청와대, 전남 부지사로 일하면서 나주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 왔다"면서 "혁신도시 조성과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으로 맞은 천 년 만의 기회를 살려 나주를 호남의 중심으로 도약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비전 실천을 위한 7대 전략으로 ▲원도심·영산강 연계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지속가능한 농업과 살맛나는 농촌 ▲빛가람 혁신도시, 자부심 넘치는 자족도시 완성 ▲에너지 신산업 선도 미래 첨단과학도시 기반 조성 ▲명품 교육도시 조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제대로 일하는 확 바뀐 시청 등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10여 명이 난립했던 민주당 예비후보 사이에서 '3인 경선'(윤병태, 이민준, 최용선)에 올라 경쟁을 벌인 끝에 승리해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윤석열 정부 '반쪽 내각'으로 출발하나

윤 당선자 "한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불발되면 총리없이 출범"

윤석열 정부의 '반쪽 내각' 상태도 길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거대의석에 가로막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인준이 불발되면 '총리 없이' 새 정부 내각을 출범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의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들과 달리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라는 엄격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반대에 나선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통과는 요연한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 인준 문제를 지렛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연결하는 이른바 '연계전략'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극한대치 속에 총리 자리를 비워두고 윤석열 호(號)가 출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10일 정부가 닻을 올리고서도 이같은 샅바싸움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등 전체 19명 후보자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불과 4명으로 초반 행정공백 사태가 예상되고 있지만, 윤 당선인 측은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검토하겠다는 '맞불' 스탠스를 보이는 등 교착상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리 공석의 경우 윤 당선인 측은 '추경호 총리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7일 이전 사퇴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권한대행으로 세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플랜B'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초대 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지며 총리가 공백 상태로 정부가 출범하는 일들이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발판으로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만해도 상당 기간 총리가 없이 정부를 꾸려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23일 김종필(JP) 전 자민련 명예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당시 다수당이면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김 후보자의 도덕성, 5·16 쿠데타 가담 전력 등을 들어 인준을 반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대통령실이 대검 부속실인가?"

'간첩 사건 조작' 가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에 대해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 또는 대검 청와대 출장소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에 검찰 시절 자신의 최측근들을 배치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전날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하며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날은 인사기획관으로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낙점했다.

신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을 검찰 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신 대변인은 "공직기강비서관은 '간첩 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라며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이 비서관 내정자를 겨냥해 "고문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앞)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총분양 140평)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광산구 삼거동(임야)▶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1억4천 (5/4)
	동구 지산동(농지)▶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4억1천 (5/4)
	북구 생용동(근린주택)▶ 감정가 3억 -> 최저가 1억 7천 (5/12)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5/12)
	서구 화정동(주택)▶감정가 3억7천 -> 최저가 2억7천 (5/18)
	북구 용봉동(주택)▶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1천 (5/26)
	동구 운림동(근린주택)▶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전남	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5/1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5/18)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최저가 31억 (5/23)
	목포시 상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8천 -> 최저가 4억8천 (5/23)
시외	충남 서천군(근린주택)▶감정가 9억2천 -> 최저가 2억2천 (5/3)
	전북 군산시(근린상가)▶감정가 25억 -> 최저가 4억2천(5/23)

010-6670-9800